

열린충남

2019 WINTER
Vol.89

권두언

주52시간 상한제 시행과 삶의 질

특집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우리의 삶

주52시간 근로제의 빛과 그늘

주52시간제에 따른 충남 제조업체의 대응과 일의 변화

논단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충남 어촌상생 연금제도 도입 방안

열린충남

THE CHUNGNAM REVIEW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 840. 1114 FAX. 041. 840. 1129 <http://www.cni.re.kr>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윤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이인배
편집위원 오혜정, 오용준, 강미야, 여형범, 박해은, 홍종남
에디터 이민우, 이유나
주소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이메일 http://www.cni.re.kr
편집·제작 승일미디어그룹(주)

문의사항은 iyayu77@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충남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대한민국을 넘어 新서해안의 중심 지역으로
세계 속의 충청남도를 꿈꾸는 곳

충청남도의 미래와 220만 도민의 행복을 연구하는
우리는 충남연구원 입니다.

2019 **WINTER Vol.89**

CONTENTS

04	권두언 주52시간 상한제 시행과 삶의 질	24	충남의 섬 가보고 싶은 섬 외연도	46	열린충남인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60	충남 소식
06	특집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우리의 삶 1. 주52시간 근로제의 빛과 그늘 2. 주52시간제에 따른 충남 제조업체의 대응과 일의 변화	30	충남시장플러스 바다로 흘러 하나의 물이 되는 강, 다른 듯 하나인 상생의 현장, 당진전통시장	50	인권 A to Z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현주소와 과제	62	연구원 소식
16	논단 1.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2. 충남 여초상생 연금제도 도입 방안	36	열린마당 우리마을 샅터. 일터. 꿈터. 천수만	54	오피니언 1.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 2. '노동자의 내일을 다르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출발 3. 헝가리의 추억과 다뉴브 강의 비극	65	충남의 사계
		40	해외리포트 지속가능한 물순환, 미국의 그린인프라 정책을 들어보다				

卷頭言

권두언

주52시간 상한제 시행과 삶의 질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장



올해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다. 요즘 ‘주52시간제’라는 용어는 사실은 틀린 표현이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에 주52시간 상한제가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다.

과거 2004년~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었건만, 주중의 연장근로시간, 주말의 휴일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토, 일요일의 휴일근로시간(각 8시간씩 16시간)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주68시간까지 허용하여 주40시간제가 반쪽 짜리로 시행되어 온 것이다. 이번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주40시간제가 이제 제대로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68시간까지 허용하던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이명박 정부 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8년이 들어서야 그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위협, 휴식보장의 미흡, 낮은 시간당 생산성, 피로사회, 일·생활불균형, 일자리 나누기 부재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OECD국가 가운데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노동시장이 긴 나라로 악명(?)을 떨쳐왔다.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아래 노동의 투입량을 늘려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산업화 시대, 그리고 남성 가장 혼자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살리던 남성 외벌이모델 시대의 산물이다. 이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빠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장시간의 노동투입량을 늘려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더구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갔다. 이제 넘너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고 최저임금도 점차 높아가는 시기에 우리 직장인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일과 직장에 모든 시간을 바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돈만 더 벌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을 원하지 않는다. 직장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정, 취미생활, 여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삶의 질, 일과 생활의 균형, 직장가 가정의 양립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되어 있는가?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주40시간보다 훨씬 길게 일해 왔기 때문에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만 봐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주 평균 40시간 이하를 일해 왔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2012년 39.2시간이었고 2017년에는 이미 38.1시간으로 줄어들어 있었다(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물론 여기에는 일부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도 포함되어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을 약간 넘을 것이다. 제조업, 육상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서 약 100만~150만 정도의 노동자가 주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전체 노동자수 1,900만 명 가운데 5.3%~7.9% 정도가 주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을 잘 준비하면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미 작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공공부문에 주52시간 상한제가 비교적 무난하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육상운수업 가운데 노선버스를 제외하고는 업종을 포함한 5개 특례업종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탄력근로시간제가 있어서 납기, 제품개발, 계절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서는(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 특정 달이나 주에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 속에 노동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상한제를 50인~299인 사업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주는 문제 등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주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주40시간제의 뒤를 이어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똑같이 받는 것이 가능할까?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기업과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고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들은 계획적인 정확한 업무분배, 점검 업무프로세스개선, 회의시간과 불필요한 회식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원들은 늘어진 식사시간 줄이기, 회사에서 개인 볼일 하지 않기, 집중해서 일하기 등을 통해서 업무효율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일생활 균형, 삶의 질 개선도 가능해진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우리의 삶

- 01 주52시간 근로제의 빛과 그늘
- 02 주52시간제에 따른 충남 제조업체의 대응과 일의 변화

01

특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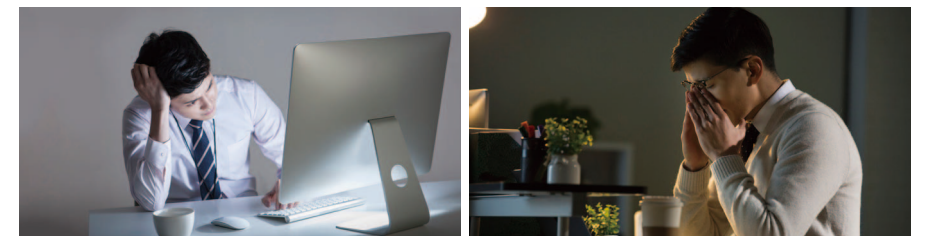
주52시간 근로제의 빛과 그늘

김윤호 | 호인사노무법인 대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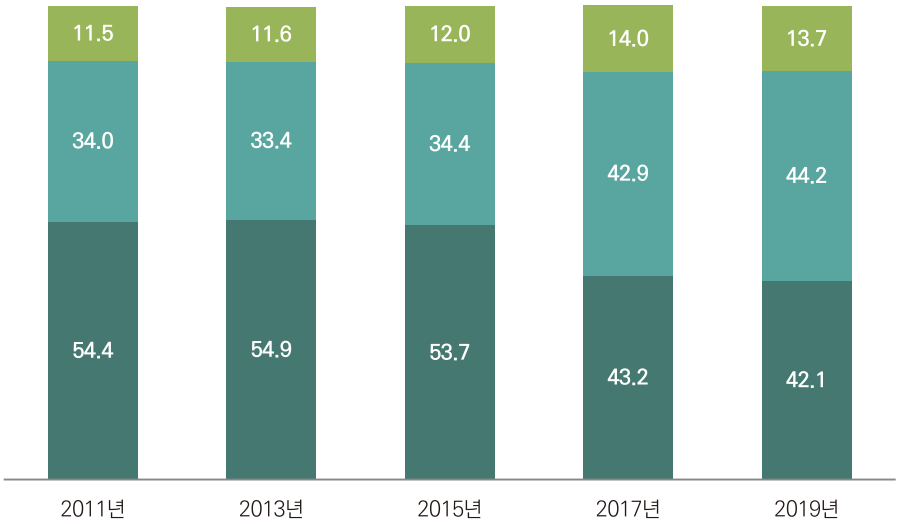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었고, 50~299인을 사용하는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긍정적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일생활양립을 의미하는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주52시간제가 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거나 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52시간 상한제의 빛과 그늘을 살펴보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장시간 노동문화를 바꾸다

한국이 오랜 기간동안 장시간 노동문화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떤 대기업 공장에서 주야 10시간씩 맞교대에서 주간연속 8시간의 교대제로 변경하여 밤샘근무가 없어지자, 직원들이 여가시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연장근무를 선호하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늘어나는 등 일중독문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었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문화는 한국의 가정생활, 생산시스템, 일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하위문화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로의존성을 끊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가정생활이 우선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
일이 우선



| 그림 1 |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증감(2011~2019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년도), 19세 이상 인구대상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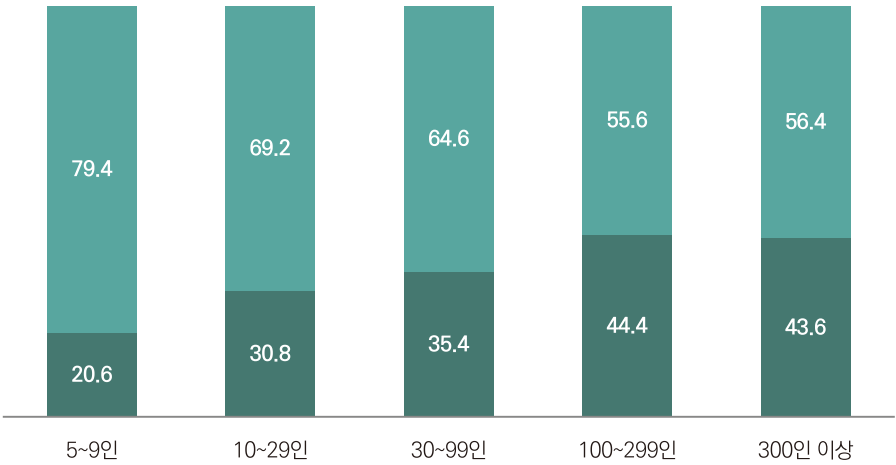
그럼에도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장시간 노동문화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결과를 살펴보면,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에 54.4%에서 2019년에 42.1%로 12.3%P가 감소한 반면, 일생활양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4%에서 44.2%로 10%P가 증가하였다.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균형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밀집지역의 경우 주52시간제 도입이후 칼퇴근족이 증가하여 퇴근시간 교통체증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퇴근시간 이후에 회식문화가 대폭 감소하여 주변식당들도 야간 영업을 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현상들이다.

대기업은 더 좋게 중소기업은 더 힘들게?

문제는 위와 같은 주52시간제의 광명이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들을 비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제도가 시행되어도 그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양립 개선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림 2 | 초과근로 단축에 대한 의견(2018년, %)

자료: 전기택 외, 2019. 2017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첫째, 중소기업 노동자일수록 연장근로를 소득증대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의 약 44%정도가 초과근로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 비하여, 30~90인 기업은 35%, 10~29인 기업은 31%, 그리고 5~9인은 20%의 노동자들만 초과근로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자가 인터뷰해본 저임금 노동자들은 초과근로 수당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바로 소득저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초과근로 감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노동조합 간부도 노동시간 단축은 찬성하지만 초과근로 단축에 의한 소득감소는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한편 초과근로 단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제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노동시간 단축 이전 임금수준을 보전받으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설비투자 등을 통해 짊어진 생산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에 임금보전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퇴근 이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등 투잡족이 늘어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전통적인 원하청 구조로 인해 원하청 위계가 낮은 기업체일수록 노동시간 설계의 자유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하청업체의 경우 미리 생산계획을 수립하여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원청업체의 물량요구를 맞추어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하청업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전에 생산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급작스런 원청기업의 물량요구 등으로 인해 초과근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2차 또는 3차 이하로 반복적인 하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청의 하위에 있는 업체들은 짧은 납기에 맞추기 위해 초과근로 수요가 폭증하거나 오랜기간 일감이 없는 상황을 반복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운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노동시간 설계의 자유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하고 노동자들의 일가정양립 증대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을 하고싶어도 구인난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을 감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하지만 노동강도가 높은 단순노동과 장시간 노동시간 투입에 의존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처우문제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이익률이 낮고 기술혁신투자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로 변경하면 보통 노동시간 단축, 휴일증가,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만,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노동자들은 초과근로 감축에 따른 소득저하를 우려할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대근무의 전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장애요인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반면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주4일만 근무하는 집중근무제도, 자율출퇴근제, 가정의 날 등 특정일에 조기 퇴근하는 캠페인, 자녀의 입학식 등에 몇주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자녀입학 돌봄휴가, 5~10년 주기로 장기휴가를 부여하는 장기근속 휴가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나 휴일부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양립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시간과 일생활양립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원하청 구조 개선
기회로 삼아야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일생활양립 수준도 어느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원하청 구조의 하위에 있는 기업들에게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원하청간 주문 및 납기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하청기업들이 체계적이 생산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주고, 최저임금 인상분 등 원가인상분이 적정하게 납품난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사 상용근로자 기준 총노동시간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전국대비 월근로시간이 6.5시간 많음), 초과근로시간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10시간 정도 길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남의 30~99인 기업들은 초과근로시간이 전국평균인 17.1시간에 비하여 15.4시간 긴 32.5시간을 형성하고 있다(2017년 기준 통계청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 충남지역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정책급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초과근로를 통해 총임금수준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성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도 적용과 관련한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지역의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삶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

노동시간 단축이 일생활양립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방식과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식과 제도들을 함께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일가정 양립수준은 최하위권에 속하며(2016년 기준,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수준), 이 지표와 관련하여 최하위 수준의 성별평등지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고, 기업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슈퍼맘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성노동자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일종독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자율성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증대 등 다양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지역별 성평등 수준 발표에 따르면, 충남은 201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평등 하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가 낮고, 여성 비정규직이 많으며,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등이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여성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고 가족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근무시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근무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하여 노동생산성을 증대하고 휴게시간과 개인생활에서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직무와 성과목표 설정, 그리고 직무결과에 책임지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직무의 경계와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될수록 노동자는 자신이 스스로 직무방법과 직무절차를 계획하고 자신의 개인생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퇴근 후 개인생활을 보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근 이후나 휴가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일생활양립을 추구한다면 제도적으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요일을 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02

특집2

주52시간제에 따른 충남 제조업체의 대응과 일의 변화

박상철 | (사)지역경제와고용 연구위원

주52시간제 추진 배경

- ‘일·생활 균형(WLB; work-life balance)’이란 개인의 삶에서 일과 개인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지향점을 담은 개념임
 - 일·생활 균형은 노동자가 일과 생활에서의 균형과 병행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으며,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휴식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음
- 그러나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은 일·생활 균형 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훼손,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8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표 1 | 주52시간제의 주요 내용

<div><div><div>•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div><div><div>- 300인 이상: 20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div><div>- 50인 이상~300인 미만: 2020.1.1.</div><div>- 50인 미만(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 인정): 2021.7.1.~2022.12.31.</div></div></div></div>

- 주52시간제 도입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충남 노동시장을 개선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초과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의 저항감(추가 노동비용, 임금 감소 등)이 발생하고 있음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충남 기업의 대응

- 이에, 충남 기업들의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대응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일자리에서의 변화를 조망하는 단서가 될 것임

- 2019년에 충남노사민정에서는 충남도내 75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의 도입과 이에 따른 대응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연중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주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표 2 | 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연 중 초과근무 주 (단위: 주)

구분	연 중 주52시간 초과 근무 주			
	기술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서비스직
50인 미만	23.1	22.1	22.8	-
50인 이상~100인 미만	19.2	14.7	19.8	24.3
100인 이상~300인 미만	13.1	11.8	14.6	8.0
전체평균	19.1	16.2	19.2	15.0

- 2020년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60% 정도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 및 개선을 완료했거나 예정하고 있음

표 3 | 준비사항: 생산설비 확충 및 개선 (단위: 개, %)

구분	확충 및 개선 완료	계획 없음	확충 및 개선 예정	합계
50인 미만	41(14.7)	144(51.6)	94(33.7)	279(100.0)
50인 이상~100인 미만	67(28.5)	83(35.3)	85(36.2)	235(100.0)
100인 이상~300인 미만	58(24.1)	102(42.3)	81(33.6)	241(100.0)
합계	166(22.0)	329(43.6)	260(34.4)	755(100.0)

-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70%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연노동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인력이 적은 기업들은 인력의 유연적 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도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 | 준비사항: 유연노동시간제 도입 (단위: 개, %)

구분	도입 완료	계획 없음	도입 예정	합계
50인 미만	38(13.6)	163(58.4)	78(28.0)	279(100.0)
50인 이상~100인 미만	46(19.6)	117(49.8)	72(30.6)	235(100.0)
100인 이상~300인 미만	92(38.2)	72(29.9)	77(32.0)	241(100.0)
합계	176(23.3)	352(46.6)	227(30.1)	755(100.0)

- 2020년에 주52시간제 적용되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55% 정도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업무혁신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나타남

표 5 | 준비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혁신 도입 (단위: 개, %)

구분	도입 완료	계획 없음	도입 예정	합계
50인 미만	39(14.0)	163(58.4)	77(27.6)	279(100.0)
50인 이상~100인 미만	47(20.0)	102(43.4)	86(36.6)	235(100.0)
100인 이상~300인 미만	60(24.9)	100(41.5)	81(33.6)	241(100.0)
합계	146(19.3)	365(48.3)	244(32.3)	755(100.0)

- 기업규모가 클수록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주52시간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 준비사항: 근무체계(교대제 개편 등) 변경 (단위: 개, %)

구분	도입 완료	계획 없음	도입 예정	합계
50인 미만	33(11.8)	151(54.1)	95(34.1)	279(100.0)
50인 이상~100인 미만	55(23.4)	95(40.4)	85(36.2)	235(100.0)
100인 이상~300인 미만	90(37.3)	67(27.8)	84(34.9)	241(100.0)
합계	178(23.6)	313(41.5)	264(35.0)	755(100.0)

-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65%정도는 임금체계 변경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에 있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도입 가능성이 높음

표 7 | 준비사항: 임금체계 변경 (단위: 개, %)

구분	도입 완료	계획 없음	도입 예정	합계
50인 미만	47(16.8)	147(52.7)	85(30.5)	279(100.0)
50인 이상~100인 미만	62(26.4)	95(40.4)	78(33.2)	235(100.0)
100인 이상~300인 미만	89(36.9)	76(31.5)	76(31.5)	241(100.0)
합계	198(26.2)	318(42.1)	239(31.7)	755(100.0)

-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교대제 개편, 유연노동시간제 등 적용을 위해서 인력채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가능한 기존 인력에 대한 조정으로 대비하고 있음

표 8 | 준비사항: 추가 인력채용 (단위: 개, %)

구분	채용 완료	계획 없음	채용 예정	합계
50인 미만	19(6.8)	210(75.3)	50(17.9)	279(100.0)
50인 이상~100인 미만	31(13.2)	170(72.3)	34(14.5)	235(100.0)
100인 이상~300인 미만	42(17.4)	152(63.1)	47(19.5)	241(100.0)
합계	92(12.2)	532(70.5)	131(17.4)	755(100.0)

- 인력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969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나타남
 - 2019년 채용규모는 736명, 2020년 채용규모는 255명으로 도입 전인 '19년에 채용을 했거나 완료
 - 기업규모별로 5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이 235명, 100인 이상~300인 미만이 525명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
 -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834명으로 가장 많고 숙련별로는 단순노무인력이 570명으로, 대부분의 인력 채용은 단순생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주52시간제의 따른 일의 변화

- 충남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투입을 통해 생산량을 확보하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52시간제의 도입은 감축된 노동시간만큼 생산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의 고민을 가중시킴
 - 가장 간단하게는 ①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투입하는 것과 ② 생산설비를 확충 및 자동화하는 대응책이 있으나, 전자는 추가 노동비용,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은 후자를 선호함
 - 따라서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확충과 자동화를 촉진시켜 일의 절차, 방식, 내용 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주52시간제 적용은 충남 제조업체의 내재된 생산직 구인난에 추가 인력채용이 더해지면서 구인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축은 노동자에게 퇴근 후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킬 것임
 - 제도개편 이전에는 노동시간과 가정생활 시간이 대립적 관계였기 때문에 일·생활균형이란 용어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향후에는 여가생활(시간·비용)과 가정생활(시간)이 경쟁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커짐
 - 이는 균형적 관계가 직장과 개인 삶에서 개인 삶에서의 시간적 균형이 더 중요해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제한된 시간과 비용을 여가생활과 가정생활에 어떻게 균형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안건이 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에 노사민정에서 시행한 동호회지원사업은 노동자의 여가생활 비용 부담을 줄여 여가와 가정의 균형적 관계 유지에 기여했다 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는 주52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충남도는 민선7기 들어 공공부문의 경우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와 함께 육아돌봄 휴가제를 도입하여 실행 중에 있음
 -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향후 민간에서도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개발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9 to 6의 전통적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 감소, 산업재해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 다만 감축된 노동시간 대비, 시간 내 집중근로를 통해 생산성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는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임
 - 기업들은 집중도 높은 노동을 위해 문화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근무체제 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노동자 역시 이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것임

01

논단1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고승희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통합연구실장

1. 서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이 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제도적 성과와 함께 권한에 대한 초점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현 정부는 국민중심, 국민참여, 국민주권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하여 지역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 등 대의제의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증대시키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정책과정의 참여비용과 정책일관성, 주민대표자의 영향력 등의 문제로 인한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과 1999년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 전국 읍면동에 선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법을 기반으로 2012년 12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기본방향’을 의결하였으며 2013년 5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추진되어 전국 3,400여 개 읍면동 중 49개 읍면동에 표준모델로 시범실시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 및 주민자치역량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대한 논의

주민자치는 주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공동체 역량의 확보가 핵심이다.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단순한 주민참여가 아닌 연대와 주체성이 포함되며 이는 주민들만의 행동이 아닌 지방정

논단

01 |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고승희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통합연구실장

02 | 충남 어촌상생 연금제도 도입 방안

김중희 | 충남연구원 차임연구위원

부의 행정과정에 대한 참여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 및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통제행위가 이루어진다. 즉, 주민자치는 공동체 형성과 참여 과정으로 사적감정을 지양하고 공공성을 함양하며 포용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주민자치는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책임지는 민주주의 기반인 것이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이 만들어져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 지방정부의 사무일부 위임 또는 위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총칙, 구성 및 운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보칙, 부칙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조례안도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등이 불명확하여 운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표 1 | 주민자치회 운영 표준조례 구성

장	내용
총칙	조례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원칙 등에 대한 규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 규정
주민자치회의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보칙	재정지원감독 등 부가사항
부칙	시행,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의 실태와 문제

충남에서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육성·지원하여 갈등해소, 주민화합 등 동네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마중물 사업비 지원, 계획·집행·결산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18년부터 도 단위 최초로 16개소 육성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서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주민총회)을 통해 수립·시행하고 있다. <가칭> 더 행복한 시범 읍·면·동 육성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읍·면·동장 임명(20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선정 개방형 읍·면·동장 채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세를 활용하여 주민자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컨설팅, 주민자치아카데미, 합동워크숍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크게 주민자치위원의 구성(공정성, 민주성, 대표성 등)과 전문성 및 역량, 역할 및 자율성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위원들에 대한 위상 및 모호한 역할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적 운영, 위원 선정의 대표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자치위원의 미흡한 역량은 자치위원 및 이를 지원하는 공직자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재정적 취약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즉, 주민자치회 운영 재원 확보방안 부재에 따른 독립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지방정부의 예산 의존으로 자율성을 저해받고 있다.

4.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주민을 대변하고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치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위상과 역할을 확보해야 하며 다양한 제도의 연계와 기존 단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신뢰성 있는 주민자치위원 위촉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신뢰도는 제도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권한확대와 연계되어야 하며 역량있는 위원의 지원과 지속적 역량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신뢰된 선출방식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선과 총회, 공개모집,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권한과 역할의 구체화가 필요시 되며 지방의회와의 연계와 협력 방안의 제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합의와 법인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 재정보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 논의도 제도화의 관점에서 필요시 된다. 주민자치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역량과 이에 부합한 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가 필요시 되며 자체 사업과 지방정부의 보완기제로서 사업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주민자치회 활동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 분이 아닌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의 검토와 기타 제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타 제도 및 사업에서의 주민자치회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5. 결론

지금까지도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를 위한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면서 성과도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주민자치와 참여는 지속적인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 모형의 발전적 구상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특성상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이를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신뢰와 역량이 확보되어야만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는 단기간에 작동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닌 장기적 과제로서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식과 역량도 중요하나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참여 교육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교육청 및 평생교육과 연계한 주민교육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학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지속적 논의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창민 외. (2015). 제주형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곽현근. (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곽현근 외. (2017).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김상목 외. (2004).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유형”. 2004년도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김필두 외. (2017).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정책이슈 리포트.
소진광 외. (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연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심익섭. (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26(4).
조석주. (20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용환. (2014).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방안. 충북연구원.

02

논단2

충남 어촌상생 연금제도 도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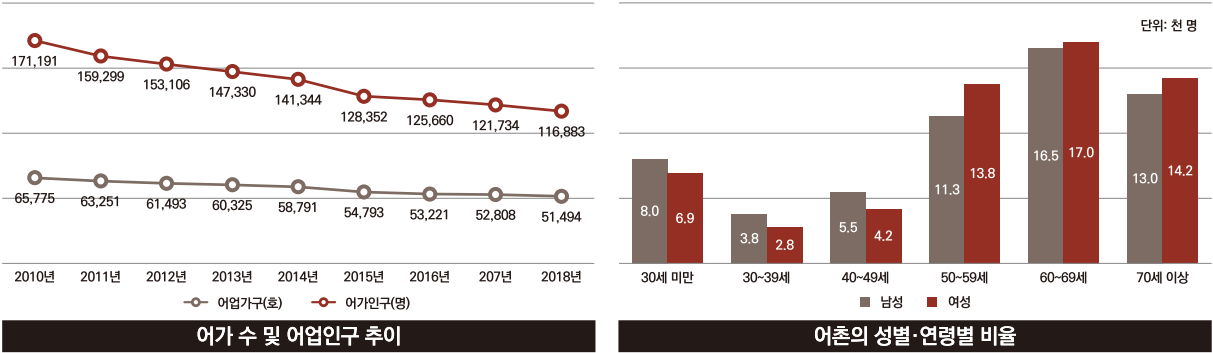
: 태안 M마을 중심으로

김종화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촌의 현황 및 변화

우리나라 어촌사회의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가 수는 51,494호, 어업인구는 116,883명으로 2010년 대비 각각 21.7%, 31.7% 감소하였다(그림 1). 어촌 고령화비율은 36.3%로 우리나라 고령화비율 14.3%보다는 높으나, 농촌 고령화비율 44.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그림 1).¹⁾ 연령대로 보면 60~69세가 28.6%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도 23.3%에 달하고 있다(그림 1).²⁾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어촌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어업생산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림 1 | 어촌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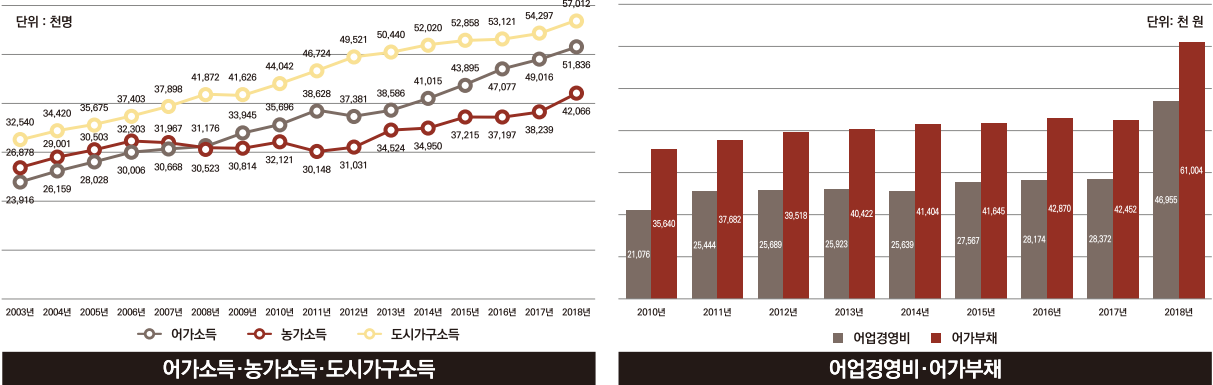
자료: (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우) 통계청(2019), 2018년 농림어업조사결과

소득측면에서 보면 2018년 기점을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을 추월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연평균 약 977만 원 높은 것을 나타냈다(그림 2). 그러나 도시가구소득에 비하여 아직도 어가 소득은 낮은 편이다. 어가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어업경영비도 2018년에는 약

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 통계청(2019), 2018년 농림어업조사결과

| 그림 2 | 어가소득 및 어업경영비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태안 M마을 소개

M마을은 태안군 고남면에 위치한 마을로 <그림 3>과 같이 안면도 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 주민 수는 108명, 가구 수 58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어가가는 56호이고,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0.2%를 차지하는 비교적 젊은 어촌이다. 주요 수산물로는 바지락, 굴, 해삼, 광어, 노래미, 갑오징어 등 서해안 어종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역이다. 현재 보령 대천~원산도~태안 영목항을 잇는 국도 77호선 연륙이 예정된 곳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어촌상생 연금제도 운영

M마을은 2016년 6월부터 어촌계원 중 자력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계원들에게도 공동수익금 일부를 분배하는 형태로 연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수혜대상은 80세 이상 고령자, 장기입원 환자, 장애 판정자, 그 외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자력으로 어장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계원들로서 2019년 기준으로 18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매년 어촌계 대의원회에서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수가 변동된다. 수혜자에게는 마을어장에서 공동생산한 총액의 30%를 균등하게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 그림 3 | M마을 위치



자료: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자료

처음 연금제도를 시작할 때에는 전국 어촌계 어디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 계원들을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 계원이 무노동·무수익의 원칙을 제기하며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촌계의 지속적인 설득과 어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수익이 향상되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M마을이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어장 50%에 대하여 휴식년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한정된 마을어장에서 다수의 계원이 어로작업을 함으로써 바지락, 굴 등 수산물 품질이 저하되고, 성숙되지 않은 것들도 출하되어 좋은 가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어장 50%에 대한 자체적인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성숙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면서 단가가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하였다. 또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 ② 고령화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였다. M마을은 현재 비교적 젊은 마을이나, 앞으로는 고령화가 심화되어 어장을 꾸릴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마을어장이 당해 세대들 것이 아닌 이전 세대가 일궈놓은 토대이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기반이라는 것에 대하여 마을주민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현재에 있는 어촌계원들도 언젠가는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 ③ 주민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M마을은 2018년 해양수산부가 수여하는 우수 어촌특화 주민역량 강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어촌마을이다. 2017년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방문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받으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고, 체험하고 있는 곳이다.
- ④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있다. M마을은 어촌계 대의원의 여성 비율이 50%로 여성어업인들에게 동등한 권한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적인 해양환경 정화 및 캠페인, 사진 전시회, 독거노인 김치나눔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마을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마을 내 펜션 운영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귀어인들을 어촌계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개방적이고 상생하는 어촌계로 거듭났다. 특히 귀어인들에게는 마을주민들 스스로 어업생산 기술을 전수하면서 그들도 마을 구성원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M마을에는 최근 5년간 6가구(18명)이 새롭게 정착하였다.
- ⑤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마을어장의 생산품목을 다양화하여 고부가가치의 패류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을 이끌 젊은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인근 어촌마을과도 M마을의 사례를 공유하여 함께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M마을의 연금제도는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촌계원들의 노력과 호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금제도 도입을 통하여 M마을이 얻은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마을의 경제 취약자들의 생활이 안정되었다. 수혜자 1인이 평균 약 500만 원 정도를 수령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마을 내 세대갈등이 해소되었다. 젊은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별 계층이 형성되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연금제도 시행이후 상호 이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 세대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다. 특히 수혜자들이 작업자들에게 간단한 음료나 간식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情 있는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다.

- ③ 마을어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고품질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었다. 노약자가 어장에서 어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줄어듦과, 앞서 언급한 어장휴식년제 도입 등을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어촌상생 연금제도 도입방안

앞서 소개한 M마을의 연금제도는 우리 어촌마을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官의 간섭이나 권유없이 민간(어촌계)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어촌개발 사업이 官주도로 이루어지고, 몇몇 사례에서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종종이었으나, M마을의 사례는 주민역량강화 등의 교육만으로 스스로 일군 성과로서 어촌개발의 좋은 모범사례이다.
- ②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복지 차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어촌계(공동체)가 지원해준다는 점이 매우 선진적이다.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노약자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주민주도형 마을 개발(내생적 발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③ 연금제도 도입을 통하여 어촌 고령화, 어장 황폐화, 세대 간 갈등 등 마을 문제를 해소했다. 현재 우리 어촌마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해소했다는 점에서 타 어촌마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④ 어촌마을 리더와 구성원이 마을교육을 통하여 상생발전의 모습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마을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면서 실천해야지 가능한 사업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M마을이 사례는 보편적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어촌개발 또는 어업인 소득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 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계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등 농업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해양환경의 보전가치 등을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연금제도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어업활동이 어려운 노약자들이 어촌마을 경관 및 환경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공익적 활동을 하면, 이를 마을연금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볼 수 있다.
- ② 어촌특화, 귀어귀촌, 수산창업, 청년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어촌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연금제도를 통하여 해결했듯이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수산물 가공, 귀어인 멘토,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 ③ 대상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M마을은 80세 이상, 장기입원자, 장애인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제도권내의 연금제도는 그 분들의 활동영역 및 성과창출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상자 범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청(2019), 2018년 농림어업조사결과

※ 본 원고는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자료와 「어촌특화역량강화 컨설턴트 및 담당자 워크숍(2019.7.30.)」에서 발표한 ‘어촌 상생형 연금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01

충남의 섬

가보고 싶은 섬 외연도

이재언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원

섬의 개요

외연도는 면적 0.85km², 산 높이 283m, 해안선 길이 2.7km, 대전 항에서 서쪽으로 53km. 보령시에 속한 70여 개의 섬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지명유래를 보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안개 연기에 가린 듯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그런 이유에서 외연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섬 이름에서 짐작 할 수 있듯이 외연도는 날씨가 좋아야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섬이다. 외연도는 바다로부터 솟아오른 세 개의 산 중 동쪽 끝에 위치한 것이 봉화산(279m)이요, 당산(73m), 서쪽 끝에 위치한 망재산(171m)을 차례로 만나게 된다. 세 개의 산에 둘러싸인 섬 한가운데는 평지라고 하였다.

외연도와 인연

외연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도부터였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관계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고 서해안의 거센 파도 때문에 겨울에는 유배지가 되어 숨을 죽이면서 봄을 기다리는 외로운 섬이었다. 섬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접근선이 떨어지지만 장점도 많이 있다. 첫째, 청정 해역으로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지는 땅도, 물도, 공기도 오염되었지만 섬은 청정성을 그대로 유지 한다. 둘째, 각종 어종이 많이 잡히고 해산물이 풍성하다. 아마도 충남에서 가장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외연도 주위에는 무인도들이 많아서 고기들의 산란지와 안식처를 제공한다. 셋째, 상록수림이 무성하고 민속에 살아있는 마을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섬들은 고령화와 미신 때문에 고유 민속 사라졌지만 외연도는 아직도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 받아서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5년도에 군산에서 정부의 명령 항로인 섬 사랑호를 타고서 외연도를 지난 적이 있다.



1. 외연도

군산에서 출발한 이 배는 3시간 만에 전북 어청도를 지나서 외연도 녹도 호도를 거친 다음 최종 목적지인 충남 대전항에 내린 적이 있다. 섬 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는 무조건 이 배를 타고서 비록 섬에 내리지는 않고 멀리서 바라 보는 것만으로도 아쉬웠지만 간접적으로 대리 만족을 느꼈다. 그 뒤로 이곳에 두 번이나 외연도를 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호'가 대규모 기름 유출 시에 녹도까지 왔다가 외연도 행은 물때가 맞지 않아서 무산되었고, 한 번은 아내하고 대전 항까지 왔다가 풍랑주의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드디어 2014년 지인들과 함께 탐사선 등대호를 타고서 진도 팽목항을 출발하여 신안군 만재도, 가거도 상, 중, 하태도, 홍도, 흑산도, 다물도, 군산 말도, 어청도, 외연도에 도착하였다. 외연도를 몇 시간 동안 잘 둘러보고 충남 신진도항으로 와서 일박 한 다음 웅도 등대와 격렬비열도를 거쳐서 다시 군산항 십이동파도를 돌아보고 목포로 돌아온 기억이 생생하다. 다시 가보고 싶은 섬 외연도가 지금도 눈에 생생히 남아있다.

외연도 둘러보기

바다 안개 때문에 섬의 형태가 잘 드러내지 않는 외연도는 대전 항에서 뱃길로 시간 반을 가면 달는 서해 고도(孤島)다. 외연도는 보령의 70여 개 섬 가운데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중에 진짜 섬맛이 나는 곳이다. 이름도 참 예쁘다. '연기에 가린 듯 아득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배를 타고 섬에 들어오면 양쪽에는 약간 높은 산이 두 개 마주보고 있고 마을이 있는 곳은 대체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방파제를 들어서면 좌우로 펼쳐지는 마을. 제법 항구다운 항구를 느끼게 된다. 들어올 때 처음 맞는 쌍등대가 있는 방파제를 뒤로 하고 안으로 들어서면 섬은 큰 편이지만 마을은 단



2. 외연도 항구



3



4

3. 외연도에 정박해 있는 등대호
4. 상록수림 표지판

오직 총 90여 척에 이르는 어선들이 외국인 선원들을 데리고 험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다. 외연도 주위의 밤바다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대낮처럼 불을 밝힌 채 고기를 잡는다. 이런 풍경은 보령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외연어화’라고 한다. 초등학교 옆으로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이 산책로이며 옆으로 당산 가는 길이 있다. 당산은 마을 풍어제의 주 무대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전 주민이 모여 풍어와 안전을 위해 당제를 지내고 띠배를 만들고 마을 앞바다에 띄우는 ‘풍어당놀이’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역사가 벌써 400여 년이나 됐다. 이 입구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외연도 상록수림 안내판이다.

하나, 보이는 것이 전부다. 마을의 포구와 규모가 제법 크고 기다란 방파제에 안전하게 둘러싸인 항구는 잘 축조된 계단식 선착장과 물량장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무슨 관광지에 온 느낌이다. 방파제 입구 주변으로 소공원 조성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계속 가면 외연도 어촌계와 여관, 식당이 있고 ‘열 가지 꿈의 보물섬 외연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선착장 주변에 여기저기 빼곡히 들어찬 가게들이 외연도가 외딴 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특이한 것은 비록 작은 섬이지만 차들이 많다는 것이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는 불과 2km 정도인데 1톤 트럭이 잘 굴러다닌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거나 나갈 때 차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액젓을 운반할 사용되는 차량들이다. 외연도의 주민들 섬이 워낙 작기 때문에 농토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한다. 먼 바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섬보다 낚시도 잘 되고 고기도 잘 잡힌다. 이것이 먼 섬인 외연도의 장점이다. 옛날에는 한 평의 농토가 아쉬운 시절 산비탈을 힘겹게 개간하여 밭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마을 일부만 제외하고는 농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5. 외연도 돌계단



6. 외연도 당집



6

외연도의 상록수림

면적 3만 2,727m²의 외연도의 당산 기슭의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제136호)로 지정된 곳이다. 일단 숲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 한 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목들로 가득 차 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외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서부 도서지방의 옛 모습을 짐작케 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수세기 동안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온 후박나무, 동백나무, 식나무 등 상록활엽수와 팽나무, 찰피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울창하다. 특히 높이가 20m, 줄기 직경이 1m가 넘는 팽나무와 높이 18m에 이르는 동백나무들이 섞여있어 장관이다. 전횡 사당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그루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리지나무가 자라고 있다. 각기 다른 뿌리에서 자란 두 그루의 동백나무가 이어진 틈새 없이 공중에서 맞닿아 하나의 가지로 연결되어 일명 ‘사랑나무’라고 불린다. 예로부터 사랑하는 남녀가 이 나무 사이를 통과하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 때문에 연인들이 일부러 외연도를 찾을 정도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10년 가을 태풍 ‘곶파스’ 때문에 가지가 부러졌다.

입구에 산책로로 나무계단이다. 그렇게 높은 당산은 아니지만 당산을 한 바퀴 돌게끔 나무로 산책로를 만들어둔 것이다. 옛 섬사람들이 봉화산(279m)에서 마을까지 땀을 흘리며 걸을 때를 생각해 ‘지계길’을 만들었다. 이 길 따라가면 섬의 자연과 장쾌한 풍경, 섬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이 산책로를 따라 오르다가 직직하면 사당이 나온다. 옛날 중국 제나라 왕의 동생인 전횡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다. 전횡 장군은 제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자 자신을 따르는 5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쫓기는 몸이 되어 동쪽으로 도망가다 외연도에 상륙하여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한 고조가 항복하지 않으면 섬을 토벌하겠다고 자신의 신하가 될 것을 요구하자 섬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5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낙양으로 건너가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섬사람들은 전횡을 수호신으로 받들어 사당을 짓고 지금까지 풍어당제 기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밖에도 외연도에서는 BC 3, 4세기경에 육지에서 이주해온 신석기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조개무지가 발굴되었다.

외연도 봉화산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산 중턱까지 산행을 수월하게 만들어 놓았다. 벤치가 있는 쉼터 왼쪽 길로 가면 봉수대(봉화와 연기를 피워 통신하던 곳)가 위치 해 있는 정상까지 이어진다. 정상에 있는 외연도의 봉수대가 복원되어 있다. 지난 2005년 6월 8일 320년 만에 고려와 조선시대에 국난을 알리던 외연도와 어청도 봉화를 재현하였다. 해군 소속 장병들이 조선 수군 복장을 하고서 어청도 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린 뒤 이를 본 북동쪽의 17km 거리에 있는 충남 보령의 외연도에서 봉화를 올리는 방식으로 시연회를 가졌다. 이 외연도 봉화는 고려 의종 3년(1149)에 금과 남송의 침입을 서울로 알리기 위해 처음 축조됐던 것인데 조선시대 숙종 3년(1677년)에 외연도 봉수대와 함께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없어졌다가 최근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봉화산의 봉수대에 오르면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외연열도의 일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외연도를 어미섬으로 하여 인근 10여 개 섬을 외연열도라 부른다.



초등학교 옆으로 난 산책길로 해서 올라오면 안부지점에 닿는다. 중심에 덩크 시설로 전망대를 만들어두었다. 북쪽 해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배려다. 해안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깊은 만과 큰 돌출부가 이어져 있으며, 북쪽 해안 곳곳에는 암석해안의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다. 이 앞에 위치한 해변이 '명금해변'이다. 타조 알처럼 생긴 큼직한 몽돌이 아담하게 펼쳐져 있고 워낙 물이 맑아 깊이 들어가도 바닥이 흰히 드러날 정도로 깨끗하다. 외연도의 대표적인 해변인데 사실 외연도는 섬이라고 하지만 번듯한 해수욕장 하나 없다. 몽돌해변은 외연도에도 있지만 돌멩이 크기가 커 해수욕장으로는 맞지 않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왼쪽으로 돌삭금이 있고 오른쪽 해안 끝에 보이는 것이 노랑배다. 명금에서 해안을 따라가다 봉화산 허리를 에둘러 '노랑배'로 이어진다. '노랑배'는 노란빛을 띄는 암석이 해안절벽을 이룬 곳이다. 절벽이 마치 커다란 배의 앞머리와 같다고 해 이름 붙었다. 그리고 노랑배 가는 길에 '해막터'가 있다. 해막은 풍어당제 기간 임신한 여인들과 월경 중인 여인들이 '피 부정'을 막기 위해 피신하던 곳이다. 당제의 날짜가 잡히고 제물을 구하러 배가 뜨면 임신부들은 곧바로 해막으로 떠났단다.

전망대에서 동쪽으로 직진하면 봉화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있다. 봉화산 정상에는 봉화대가 있다. 어청도에서 봉화를 받아 녹도로 전했다고 한다. 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날씨가 좋아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해무에 가린 게 더 잘 어울리는 섬이다. 정상에 오르면 외연도는 물론 주변 섬들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등산로에 잡초가 무성해 정상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다. 모든 섬에는 물이 부족 한 것이 특징인데 외연도에는 샘이 다섯 곳이나 있다. 워낙 산림이 울창하여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웃 어청도와 함께 해마다 파시가 성황을 이룰 정도로 고기가 풍어를 이루었다. 지금은 어자원 고갈로 과거의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먼 섬이라는 장점 때문에 고기들이 그런 대로 잡힌다. 외연도 주위에서는 자연산 돌김과 미역, 굴의 채취와 멸치, 전복, 해삼 등이 잡힌다. 가난한 시절에 산에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서 땔감으로 쓰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도 외연도의 상록수림을 보호하면서 지켜온 그들이다. 그 마음으로 바다에 나가 일하며 살아가는 외연도 주민들에게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섬을 떠나왔다.

외연도 개요

외연도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딸린 섬으로 면적 0.85km², 산 높이 283m, 해안선 길이 2.7km, 2019년 160가구 인구는 460명이다.

지명유래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연기에 가린 듯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그런 이유에서 외연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다른 설로는 '통신 수단이 발달하기 전에 급한 일이 생길 때 봉화를 올려 알렸다'는 것에 근거해 붙여졌다고도 한다.

▶ 외연도 가는 길

대전 여객선 터미널(041-930-5050)에서 오전 8시 10분과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 출발한다. 호도와 녹도를 경유한다.

관광명소

명금해변

타조 알처럼 생긴 큼직한 몽돌이 아담하게 펼쳐져 있고 워낙 물이 맑아 깊이 들어가도 바닥이 흰히 드러날 정도로 깨끗하다. 해변을 따라 근사한 산책길이 놓여있다. 해안산책로 동쪽 끝자락에 서면, 바다 위에 힘차게 솟은 '매바위'를 관광할 수 있으며, 그 앞에는 처녀처럼 생긴 '여인바위'가 애처롭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해변의 왼쪽 끝자락에는 '노랑배 바위'와 '병풍바위'가 바다를 수놓고 있으며 북쪽절벽엔 상투를 닮았다는 '상투바위', 고래의 성기를 닮았다는 '고래조지 바위' 역시 섬의 신비를 더해 주고 있다.

외연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

외연도 마을 뒷산 능선 위에 있는 당림으로서 중앙에 서낭당이 있어 주변의 숲이 잘 보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후박나무·동백나무 등의 상록수종이 우거져 높이 20m에 달한다. 이 숲의 주변에는 큰 나무가 없으므로 이 상록수림이 유일하게 과거에 자라던 이곳 숲의 유물적인 표본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는 나무높이 20m, 가슴높이 줄기둘레 1.4m에 달하는 탱나무의 거목도 있다.

전횡사당

상록수림 안에는 옛날 중국 제나라 왕의 동생인 전횡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다. 전횡 장군은 제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자 자신을 따르는 5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쫓기는 몸이 되어 동쪽으로 도망가다 외연도에 상륙하여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한고조가 자신의 신하가 될 것을 요구하자 5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전 주민이 모여 풍어와 안전을 위해 당제를 지내고 띠배를 만들고 마을 앞바다에 띄우는 '풍어당놀이'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연리지나무(사랑나무)

전횡사당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그루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리지나무가 자라고 있다. 각기 다른 뿌리에서 자란 두 그루의 동백나무가 이어진 틈새 없이 공중에서 맞닿아 하나의 가지로 연결되어 일명 '사랑나무'라고 불린다. 예로부터 사랑하는 남녀가 이 나무 사이를 통과하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 때문에 연인들이 일부러 외연도를 찾을 정도다.

01

충남시장플러스

바다로 흘러 하나의 물이 되는 강,
다른 듯 하나인 상생의 현장,
당진전통시장

이유나 | 충남연구원 홍보담당

‘함께’라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행복과 성장·안정이라는 균형잡힌 푸른 도시를 꿈꾸는 당진, 서울역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1시간 반, 국도로 이동해도 2시간 남짓이면 닿는 곳. 당진전통시장을 다녀왔다.

올 봄, 덕산시장을 들렀을 때 풀빵 할머니께 전해 들었던 ‘갈만한 장’, 그곳이 바로 당진전통시장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당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노브랜드 간판이 눈에 띄었다. 이 시골까지 대형마트가 들어온건가 하는 마음에 내심 괄씸했다.

초입에 있는 수산시장 내부가 무척이나 깨끗하다.

당진전통시장 수산시장



당진전통시장 수산시장 2층 대형마트 상생매장

방문한 시간이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수산시장 2층에 식당이 있다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2층으로 올라서서야 대형마트에 대한 괄씸함이 누그러들었다. ‘상생’ 그 이상적인 문구가 바로 눈에 띄었다.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꿈꾼다 했다. 혹여 그 말이 장사속일지 몰라도 그 포부가 흐뭇했다.

2층에는 마트가 들어서 있고, 입간판에는 상생이라는 표어와 함께 신선제품은 판매하지 않으니 당진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상냥한 멘트가 적혀있었다.

판로 지원과 상품 공동 개발, 콘텐츠 지원, 전통시장의 현대화 지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더 이상 적이 아닌 동행자가 된다. 마트옆에 자리잡은 식당에서 배를 채우고, 느릿느릿 시장 구경에 나섰다. 기대보다 썰렁했던 초입 부에 큰 기대를 하지 않던 탓도, 배가 부른 탓도 있었다.

그러나, 마치 터널을 지나 눈을 채 뜰수도 없는 강렬한 햇빛이 비추듯, 600m를 육박하는 대장정의 당진전통시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진전통시장 먹거리



찐 옥수수와 파배기는 기본이요, 번데기와 곱창은 선택이라.. 돼지 껍데기와 기름에 노릇노릇 구운 전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이다.

아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우선 걷기 시작했다. 걷다보면 하나 짬은 들어갈 자리가 비워지리라.. 강이 흘러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라 했던가. 여느 문화제 먹거리장터도 부럽지 않은 다양한 먹거리와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당진의 지역적 특색을 안고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의 물품들이 점심시간이 한참 넘어서 장을 여전히 왁자지껄하게 흔들었다.

1974년 개장한 당진시장은 상설시장으로 2000년 서해대교 개통으로 수도권과 더욱 가까워 졌고, 2012년 당진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전국 시장 최초로 대형마트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2018년에는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가졌다. 본래 전통시장 상점가 인근 1km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대형마트 입점이 규제되어 왔었는데, 당진시장은 대형마트와 판매품목을 달리 하고 편리성을 더한 발상의 전환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당진시장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 4곳에 추가로 대형마트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가는 시장이 아닌가 싶다. 5일, 10일로 장이 서지만, 10일, 20일에 찾아가면 더 많은 볼거리를 마주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하시기를..

수많은 먹거리 섭렵을 다음 장날로 다짐하고, 차를 돌렸다.

석문방조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서 석문면 장고항리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방조제. 방조제의 축조로 석문호가 생겨났고, 웅장천이 석문호로 향한다. 석문방조제와 삼교호방조제, 대호방조제가 당진의 드라이브 코스 3대 제방으로 꼽힌다고 한다.



당진 석문방조제



당진박물관

시장에서 송악읍 방향으로 10여 분을 이동하면 당진시 시곡동 산곡길에 충청남도 제1호 박물관으로 등록, 지정된 당진 문학관이 있다. 문학작품을 소장하고 강의와 토론이 이뤄지는 일종의 문학 창작 공간이라고 한다.

2015년 한국도량형박물관 내에 개관한 당진박물관은 당진에서 출생했거나 당진에 적을 두었던 시인과 소설, 수필가 등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들의 작품과 그들이 사용하던 유품들을 수집, 발굴해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방문했던 날은 관리하시는 분이 잠시 자리를 비워 내부 관람은 하지 못했다.

1. 당진소재 한국도량형박물관
2. 당진 한국도량형 박물관 무지내에 자리한 당진문학관



지난 4월 펼쳐진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사진출처: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길목에는 500년 전통의 중요무형문화제 제75호인 기지시줄다리기를 비롯하여 국내외 줄다리기 관련 자료 및 각종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송악읍에 있는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이다.

2011년 개관한 박물관은 한국의 대표민속문화 기지시줄다리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지상 3층의 규모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실 및 야외의 실제크기의 줄을 전시해 놓은 줄전시관과 시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시 송악읍의 기지시마을에서 5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줄다리기로, 매년 4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가 펼쳐진다.



3. 솔외성지 일구
4. 김대건 신부가 1845년에 제작한 조선전도

솔외성지

당진시장을 기점으로 석문호와 90도 각도로 30여 분 정도 이동하면 당진군 합덕면에 소재한 지나가면서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곳이 있다. 바로 솔외성지.

솔외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이다.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지 2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한 2021년, 김 신부는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김대건 신부는 순교로 짧은 삶을 살았음에도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평등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조선전도를 제작해 유럽사회에 조선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김 신부의 10대 선조인 김희현이 아산 현감 역임으로 지금의 내포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8대 선조인 김수완 때부터 솔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784년경 김대건 신부의 백조부와 조부가 천주교에 입교하자 가장인 증조부도 입교하여 가문이 천주교 신앙으로 귀의하였고, 그 후 잦은 박해로 가족들이 여러차례 투옥되고 고문을 받다가 순교까지 하여 솔외를 ‘순교자의 고향’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김 신부는 1846년 26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2004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김 신부의 생가를 복원, 그후 기념관 설립 등으로 지금의 솔외성지가 자리를 잡았다.

2014년 국가 사적지로 등록되었고, 그러던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솔외성지의 이름이 더욱 유명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시 모습을 재현해 놓은 김대건 신부의 생가

고종된 김 신부의 생가터는 물론 소나무숲과 기념관, 십자가의 길 등이 넓게 배치되어 있어 꼭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러 둘러 산책의 가벼움으로 역사를 느껴보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올 겨울, 당진전통시장에 둘러 넘쳐나는 먹거리에 기운을, 셀 수 없는 볼거리에 재미를 얻고 자연경관과 역사를 마음에 담아보길 추천한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처럼 어우러지는 상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당진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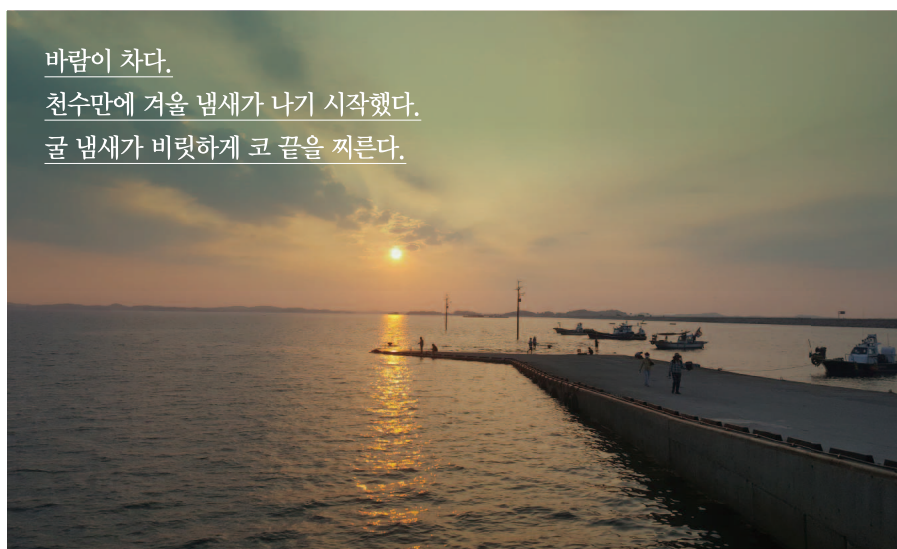
- 시장형태: 정기·상설시장
- 개설년도: 1974년 6월 4일
-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장길 99
- 장서는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31일)

01

열린마당

우리마을 삶터. 일터. 꿈터. 천수만

신현미 | 천수만권역 사무국장



바람이 차다.
천수만에 겨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굴 냄새가 비릿하게 코 끝을 찌른다.

천수만은 서쪽으로는 태안군과 안면도, 북동쪽으로는 서산시 그리고 동쪽으로는 홍성군과 보령시에 둘러싸여 있고, 천수(淺 얕을 천, 水 물 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바다이다.

천수만 AB지구는 1984년 완공된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이곳은 과거에 갯벌이었는데 간척 이후 방조제가 생기면서 대규모 담수호(A지구 간월호, B지구 부남호)가 생겨났고 대규모 농경지와 습지가 조성되었다.

이 간척사업으로 누군가는 삶터를 잃었고, 다른 누군가는 일터를 찾았다.
주어진 환경에 맞게 어부는 새로 생긴 농경지에 농사를 짓게 되었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기 시작했다.

여기 작고 소박한 궁리포구.



얼마 전 가을 대표 수산물인 대하와 전어잡이가 끝났다.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는 올해 수확이 별로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러면서도 그물을 손질하는 손이 무척 빠르다. 내년을 준비하며 갖는 기대 가득한 마음이 그의 손을 빠르게 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여기 천수만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마을할머니는 젊은 새댁, 다른 주민은 사무장, 체험 오는 학생들은 선생님 등 호칭도 제각각이다. 가끔 행정이나 마을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마을활동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러주기도 한다.

처음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마을주민이 거의 오지 않았다.
상주하는 근무자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마을사업으로 지어진 그럴싸한 건물은 나하고 상관없는 곳이기도 하고 이질감 느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마을주민에게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리가 불편한 마을어르신은 어업확인증을 들고 오신다. 면사무소까지 가려니 차편이 마땅하지 않다고, 누가 여기오면 복사해준다고해서 왔다며 오늘 처음 본 마을주민이 어색한 듯 종이 한 장을 내민다.
마을일을 하다 보니 복사와 한글작업은 본의 아니게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난 이 두 가지 일로 꽤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천수만권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홍성군 서부면에 조성되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관 자원이 융합된 어촌개발을 테마로 진행되었다. 해상낚시체험공원, 오토캠핑장, 갯벌체험관,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이 조성되었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들어갔다.
마을주민들의 기대와 참여로 시작된 사업운영은 예상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사업이 처음인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운영준비금 없이 시작된 사업은 건물관리비와 운영채료를 대기에도 빠듯했다. 더군다나 방문객이 바라는 서비스와 현장의 서비스 차이는 너무 컸다.



1. 마을학교(갯벌생태)
2. 갯벌생태 알아보기

시간이 흐르며 참여하던 마을주민이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했다.
남은 사람들도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2017년 천수만권역은 큰 변화를 겪었다.
여러 개의 운영법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별 시설관리자 중심에서 운영위원회 내에 사무국 중심으로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 운영이사들의 추가 출자로 부채와 운영비를 분
제하였다.
사무국 내에서는 운영체계 구축과 거점센터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내부인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철저한 사업계획과 운영예산이 필요
했다. 무임금에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진 운영인력의 전문화가 필요
했다.
2019년 천수만권역은 전문적인 역량과 서비스를 갖춘 상근근로자를 고용하며 서비스와 운영의
질을 높이고, 사전 운영계획으로 시행착오를 줄여갔다.
사무국도 각 시설별로 마을학교, 주말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등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 내 기관단체들과의 네트워크로 활동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3. 어촌캠프
4. 굴 양식장 견학

천수만권역은 여럿이 함께 천천히 가고 있다.
서툰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더디게 내밀고 있다.
도와주려고 등을 떠밀지도 답답함에 손을 끌지도 않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기대해 보자.

오늘 사무국이 무척 분주하다. 피해보상을 받을게 있다며 마을주민 한 분 두 분 오신다.
필요서류 몇 장을 복사 할 줄 모르니 복사기에 종이를 가득 채워 놓는다.
오늘도 난 이 마을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5. 굴 작업 체험

01

해외리포트

지속가능한 물순환, 미국의 그린인프라 정책을 들어보다

이상진 |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김영일 |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영준 |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강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고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¹⁾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빗물관리, 저영향개발, 물순환 등 도시 물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²⁾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저영향개발 및 그린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도·시·군 공무원 14명과 함께 미국 서부지역(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애틀)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사례 조사를 다녀왔다. 본고에서는 미국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얻은 저영향개발 및 그린인프라 주요 정책과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버사이드 홍수조절 및 물 보전국

리버사이드 홍수조절 및 물 보전국(Riverside County Flood Contro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은 범람원 및 홍수지역 관리, 수치지형도 및 GIS, 배수관리, 건설허가 및 개발검토, LID시설 설계 및 실험, 하천시설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리버사이드 홍수조절 및 물 보전국에서는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위한 LID 기술을 개발하고자 2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012년 캘리포니아 최초로 LID 테스트 시설을 설치하였다. LID시설의 테스트 및 시연을 위해 주차장 등에 실제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여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된 LID시설을 설계 및 시공시에 적용하고 있다.

1) 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함

2) 생태계 기능회복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연적인 공간 혹은 자연에 가까운 공간들의 기반시설로 공원, 수역, 산림 등을 말하며, 반대 개념으로 도로, 철도, 상업지구 등의 ‘그레이 인프라(Gray Infrastructure)’가 있음

리버사이드 홍수조절 및 물 보전국에서 테스트 중인 LID시설은 총 3종류로, 투수성 포장(Porous pavement), 식생체류지(Bioretention Basin), 빗물 집수 및 저류시스템 등이다. 3종류의 시설에서 각각 차집된 빗물은 자동시스템을 통해 분석실에서 채취하여 유기물, 중금속, 박테리아 등을 포함하여 총 31개의 수질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투수성 포장은 일반 포장 재료에서 잔골재를 제거하여 포장재가 충분한 공극을 함유하도록 구성하여 강우유출수가 포장재를 통과하면서 일부 오염물질이 저장된 후 토양에 침투되는 기술로 투수성 콘크리트와 투수성 아스팔트가 적용되고 있다. 시설운영자의 현장경험에 따르면, 공극의 막힘 현상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투수성 아스팔트보다 투수성 콘크리트가 더 유리하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투수성 콘크리트에 15L 정도의 물을 부렸는데 순식간에 물이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참조). 다음으로 식생체류기법은 미국 EPA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식생을 도입하면서 질소흡수, 증발산, 미생물의 처리기작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와 같은 식생체류기법은 빗물이 해당시설을 통과하면서 빠른 유출을 늦출 수 있으며, 모래층과 식물뿌리의 흡착작용 및 미생물 분해를 통해 오염물질이 정화되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 리버사이드 홍수조절 및 물 보전국에서 조성한 초기 식생체류지의 토양은 모래 85%와 퇴비 15%로 구성되었으며, 토양층 아래 필터층을 깔고 바닥층은 자갈로 구성하여 비가 내리면 식생체류지를 통과한 빗물이 배수관을 타고 분석실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야생동물에 의해 토양이 훼손되거나 토양 사이 공극이 막히는 현상, 빗물이 전체 층을 통과하지 않고 일정한 물길로 통과하는 현상, 시설을 통과한 빗물이 배수관으로 흐르지 않고 월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시설운영자가 이야기해 주었다.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2018년 토양배합비와 토양경사 등 설계구조를 새롭게 개선하였고, 특히 토양구성을 실리카 모래 50%, 코코넛나무 껍질 20%, 바이오차 10%, 그리고 기존 토양 20%로 변경하였다. 설계 변경을 통해 대부분의 수질항목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으며, 육안으로도 설계변경 이전의 시설에 비해 식물의 성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참조). 또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하여 식생체류지에 저류 및 통과시켜 빠른 유출을 늦추고 불순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었다.

| 그림 1 | 투수성 포장효과 시연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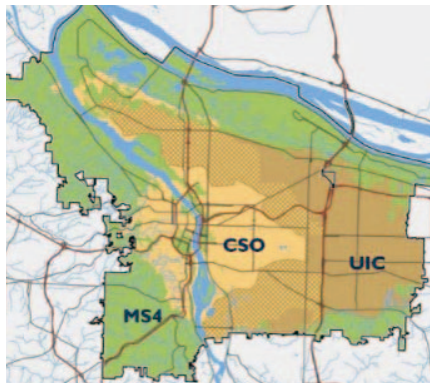
| 그림 2 | 식생체류지 개량 전·후 비교



1. 개량 전(2018년)
2. 개량 후(2019년)

포틀랜드시 환경국

포틀랜드시 환경국(City of Portland Oregon, Environmental Service)은 공중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포틀랜드시의 우수 및 폐수 관련 모든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 내 수질오염과 홍수, 침식, 관거 월류부하 제어(대형 관로 프로젝트), 지하수 충전, 서식지 손실 및 훼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포틀랜드시는 미국 북서부에서 가장 큰 콜롬비아강(2,000k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970mm이다. 강에 인접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홍수 시 하천이 범람하거나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을 우려하여 강우 시 빗물이 유역 내로 직접 유출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빠르게 지하로 침투시키려는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3 | 포틀랜드의 강우 유출관리 시스템별 구역도

포틀랜드시는 빗물관리 측면에서 전체지역을 3개의 구역 - CSO (Combined Sewer Overflow)³⁾, UIC(Underground Injection Control)⁴⁾, MS4(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⁵⁾ - 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빗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SO지역은 하천에 인접해 있고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으로 강우 시 빗물 유입에 따른 하수관

- 3)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합류식 하수관거에 생활하수와 빗물이 혼합되어 넘치는 물을 의미
- 4) 분류식 하수관거 시스템: 빗물을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 또는 강으로 배제
- 5) 지하수 주입조절: 빗물을 처리하여 땅 아래 깊은 곳으로 주입

| 그림 4 | 포틀랜드시의 녹색거리(Green Street)





| 그림 5 | 포틀랜드시의 생태지붕(Eco-roof) 및 빗물정원(Rain Garden)

시애틀 공공사업부

시애틀 공공사업부(Seattle Public Utilities, SPU)는 시애틀시의 41개 부서 가운데 상수도 및 하수도 시스템 운영과 요금 징수,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고형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시애틀시에서는 LID 대신에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⁶⁾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린빗물인프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시애틀시도 포틀랜드와 마찬가지로 투수성 콘크리트를 이용한 투수도로 및 주차장, 빗물정원, 녹색(생태)지붕, 식생체류지 등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도시로 인구유입이 많고 발전시설 및 오염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지역특성상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홍수빈도 증가에 따른 범람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도시 물순환 측면에서 그린빗물인프라를 도시 곳곳에 적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빗물관리까지 가능한 정책을 실현 중에 있다. 실제 그린빗물인프라의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그린빗물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6) 자연의 물순환 체계를 모방하여 강우의 차단, 침투, 증발산을 유도함으로써 빗물의 직접 유출량을 저감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옥상녹화, 빗물정원, 빗물이용시설, 투수성 포장 등의 기술요소를 포함

시애틀시의 그린빗물인프라는 총 548acre(2.22km²)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 건축물 준공 시 그린빗물인프라를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지만, 빗물 정원을 설치하면 1ft²(0.09m²)당 4달러씩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금액은 연평균 5천 달러 정도이며, 대형빌딩 및 공공시설은 10년, 일반주민은 5년의 관리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회수해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2020년까지 약 7억 갤런(2,649,636m³)의 빗물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2억6천 갤런(984,150m³)의 빗물이 관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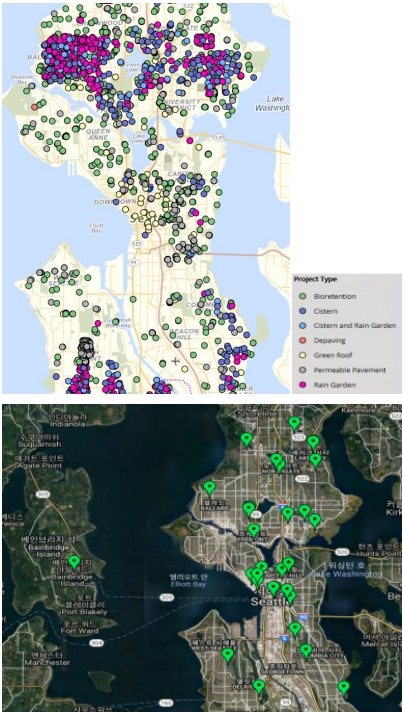
시사점

미국 서부지역의 그린인프라 주요 정책과 기술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 습득한 경험 및 정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그린인프라 정책추진에 앞서 물순환 회복차원에서 빗물관리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애틀 사례와 같이 빗물관리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그린인프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사례와 같이 빗물관리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그린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LID기법 적용을 통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에 비중이 있는 반면, 미국 서부지역의 도시들은 빗물에 따른 홍수 또는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빗물을 지하로 빠르게 침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그린인프라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 저감보다는 물순환 회복 및 개선에 목표를 두고 빗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인프라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LID시설 설치를 통한 다양한 현장조사 및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 바가 있으나, 전체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다양한 현장조건을 대상으로 그린인프라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그린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사례에서와 같이 그린인프라 시설의 설치, 조사 및 분석, 평가를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인프라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빗물관리를 위한 그린인프라 설치 유도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포틀랜드 사례에서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불투면적이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 강제적으로 그린인프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그린인프라 설치에 있어 지역 내 하수처리방법, 지형조건, 시설물 등의 조건을 반영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적용하여야 한다. 미국에서와 같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및 기술의 적용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수질개선보다는 물순환 회복을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불투수면적에 대해 강제적인 그린인프라 설치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6 | 시애틀시의 그린빗물인프라 설치 현황도

01

열린충남인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이유나 | 충남연구원 홍보담당

“역사는 존재하고 있고, 그 역사를 누군가 정리할때 비로소 그 역사가 가치를 갖는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아픔을 역사의식제고와 역사정리로 회복하고자 동학농민운동에서 독립운동에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성과 존중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를 소리없는 외침으로 하루하루 펼쳐온 김학로 당진문화연구소장을 만났다.

그는 당진신문에 1년 4개월 동안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연재했다. 지난 6월 마지막 기고를 마무리한 그는 글을 모아 출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우리민족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아픔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강인함을 가진 민족이라 말했다. 그 주권을 쟁취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궁금해졌고, 그러던 중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국민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에서 그 정답을 찾았다고 한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상이고, 그 사상이 3·1운동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주적 가치, 평등의 가치, 자주의 가치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126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라 말했다. 지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을 그때 이미 생각했고,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그때 대한민국 사상의 뿌리가 형성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조상들은 126년 전 왕권사회의 계급속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치를 정립시켰다. 또한 어린이 인권에 대한 존중권도 동학에서 나온 개념이었다.

자주라는 말은 대외적인 자주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것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 역사에 대한 의식이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남은 생을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고, 어울리는 사람들과 의미있는 삶을 생각하다 보니 역사 연구를 통해 대중적으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당진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연구소를 만들고, 정기적인 학술발표를 했다. 그것을 모아 책을 만들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독립운동가에 대한 글도 썼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찾은 날, 현재의 활동에 대해 묻자 그는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역사 연구를 하던 중, 고려인 동포가 일제 강점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닿는 대로 고려인 동포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날 고려인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그날부터였다.

고려인 동포는 당진, 그 중 합덕에 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어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그는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아이들 돌봄교실을 여는데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지역아동센터와 스포츠센터가 설립될 예정이지만, 완공까지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기에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세세하고 섬세한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와 활동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터뷰 중 만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러시아어로 대화를 했다.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왔지만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 부모의 교육은 물론 공적 교육에서도 소외받는 아이들,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한국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고 했다. 아이들을 위한 관심을 부탁했다. 더욱이 고려인은 우리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1919년 갑자기 시작된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부터였다. 아니, 어쩌면 그 훨씬 이전부터였다.



하교 후 공부방에 모여
한글공부를 하고 있는 고려인 아이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깨달았으며,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양성 존중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충절’과 ‘양반의 고장’을 강조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연재 역시 1년째 이어가고 있었다. 앞으로는 일제강점기에 당진을 비롯한 충남에서 벌어졌던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더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이야기들을, 그 뒤로 민주화까지.. 10여 년은 족히 넘는 기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역사는 존재하고 있고, 그 역사를 연구해서 정리하면 그 역사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에 대한 관심의 시작을 문자 살며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생지자(生知者)”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당진역사문화연구소 김학로 소장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생지자인지도 모르겠다. 왕권의 낯선 계급사회에서 평등을 말하고, 일제의 핏빛 지배에 맞서 주권을 외쳤던, 뼈를 뚫는 총탄에 민주를 외치고, 촛불로 우리의 가치를 평화로이 주장한..

그가 말하는 우리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를 향한다. 역사를 정리하며 정립되는 가치는 어린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는 평등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며,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평등을 말할 수 없다.

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진리를 역사를 통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 열정을 통해 깨닫게 해준 김학로 소장에 다시한번 감사를 표한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동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래본다.

01

인권 A to Z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현주소와 과제

김혜영 | 충청남도 인권센터장

1. 머리말

충청남도 인권정책은 2012년에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의해 2013년 1기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 충남도민인권선언과 충청남도 인권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질적인 광역단위 인권정책 기본 틀이 완성되었고, 2015년 도청 자치행정과 에 인권증진팀이 만들어지고 2016년 12월에 도청이 직영하는 인권센터가 개소되어 충청남도 인 권행정은 조직과 예산을 갖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지역 주민은 지자체 행정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 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인권기구가 실생활과 가깝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서와 제도를 두는 근거가 되는 인권조 례는 법률이 아님에도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조 례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충남의 15개 시군 모두 인권조례가 제정 될 정도로 인권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광 역지자체와는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대부분 인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인권행정을 펼치 는 부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아산시만이 인권센터를 두 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행정이 지 역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려면 행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을 만들고 수행하는 과정 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인권행정이 충청남도에서 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충남인권조례의 폐지 이후 재제정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

충남 인권행정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8년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제정되었던 사건을 되돌아봐야 한다. 필자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기 전부터 충남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충남인권 조례지키기 운동을 해왔고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당시 충남도의회 3 분의 2를 차지하고 있던 보수정당의 도의원들이 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도의원들이 본인들의 손으로 제 정했던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충남인권조례 폐 지 서명운동이 충남지역 전역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기독교계 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 한다고 일반적으로 유포했고 일부 목사들이 나서서 교회 신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천안과 아산 등지에 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보수정당 도의원들을 압박해 인권조례를 폐지하도록 만든 것이다. 기독교계의 이 러한 움직임에 반대하여 충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기독교계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과 이를 근거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 으로 보아 인권조례 지키기 운동을 전국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6월 전국지 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보수정당 도의원들이 대거 낙선하였고 새로 구성된 도의원 의 3분의 2가 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여 2018년 10월에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처럼 충남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기독교계의 주장 보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현주소

충청남도에는 인권행정을 위해 조직적으로는 인권증진팀과 센터장과 상임인권보호관, 비상임인권보호관 을 두고 있는 인권센터, 자문심의기구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와 지역별 인권지킴이단을 두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아래 인권증진팀과 인권센터가 있어 ‘과’ 단위의 인권전담부서는 없다.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등은 인권전담부서가 있고 그 아래 인권 관련 팀들이 여러 개 있어 인권행 정을 부서단위에서 펼치고 있다. 충청남도도 인권행정의 규모가 매년 확대하고 있어 인권행정만 전담하 는 부서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권센터의 경우 인권침해구제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9 년부터 실시하는 자치법규와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8월 1일부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받드 시 거치도록 하였고 인권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020년 에는 인권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더욱 확대해야 하므로 인권영향평가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도 인권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 다고 볼 수 있다. 인권증진팀도 매년 도청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권위원회, 인 권지킴이단, 인권시책토론회, 인권기본계획 수립, 기초지자체 인권담당 공무원과 연계활동, 인권증진 공 모사업, 인권주간행사, 민간인 학살 피해 발굴사업 등 업무량이 많다.

지자체 인권기구 중 중요한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문심의기구로 위치 지어 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재 지자체의 인권위원회는 자 문기구에 머물러 있다. 인권기본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합 의제 행정기구로 높이려면 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작년 기독교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운동으로 홍역

을 았은 경험은 충남도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는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권보호관회의만이 유일한 합의제 인권행정기구로 운영하는데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진정건에 대해 상임인권보호관 3명(인권센터 상근 임기제 공무원), 비상임인권보호관(분야별 전문가) 5명이 합의하여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진정건에 대해 상담과 조사 및 결정을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았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해야 하므로 인권보호관회의의 전 과정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센터에 상임인권보호관이 있는데도 비상임인권보호관을 둔 것은 인권침해조사구제업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결정하는 것이 인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상임인권보호관 위촉으로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인권침해구제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충청남도가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행정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4.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과제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다시 제정된 충청남도에서 인권행정이 뿌리 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필자는 시민단체 천안여성의전화에서 활동하다 충청남도인권센터에 들어와 일하고 있으므로 관행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된다. 지자체 행정이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권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충남도 인권행정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해보겠다.

첫째는 인권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인권적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정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이러한 행정을 통해 그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지를 행정의 좌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에는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어 매년 인권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인권침해구제,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등의 인권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권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인권증진팀과 인권센터는 자치행정과 소속이어서 전담부서의 지위가 아니므로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불안할 수밖에 았다. 특히 인권센터의 위치는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소속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2년 임기 후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인권업무의 독립성이 조직적으로 확보되지 았았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더불어 인권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는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지 았은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는 다시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았도록 충남 도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충남시민사회단체와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에서 인권행정은 광역단위에서만 활성화되어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산시만이 인권행정을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좀 더 았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실현해야 한

다.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든 후 인권센터를 준비할 수 았었던 것은 아산지역 시민단체가 인권조례를 만들고 지키는 운동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아산의 시민들이 인권행정에 관심을 갖고 고비마다 개입하여 인권조례를 지켜내고 인권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아산시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권센터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인권행정은 충남에서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교류를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 아직 충남의 인권행정역사가 길지 았으므로 충남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의 타지자체 사례를 도입하여 충남에 맞게 적용하는 등 교류와 협력 사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인권행정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지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현재 인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인권행정의 수혜자인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인권행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01

오피니언1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

이선영 | 충남도의원(행정자치위원, 의회운영위원)



지난해 연말부터 유독 충남에서는 산업재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현장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그 결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충남지역의 산업재해 사건은 연이어 일어났고 한화토탈, 현대제철 등 사건들에서 보듯이 유해화학물질 유출,은폐로 심각한 대기오염 및 지역민들이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환경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이어 벌어지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산업재해 및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TF팀’(이하 ‘노동안전 TF팀’이라 칭한다) 구성을 제안했고 충청남도가 이를 받아들여 노동안전 TF팀을 받아들여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사업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노동안전 TF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충청남도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확립하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노동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사업자,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안전 TF팀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서 위에 언급한 주체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충청남도가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동해 내면 좋겠습니다.

충남지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충청남도의 기본 입장은 “현재 산업현장 관리·감독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문제는 지방자치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요즘 지방자치정부가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업무라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분야들 또한 온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 인식하고 정책 집행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

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분권 및 재정분권까지 제도화 하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지방정부도 미리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문제 및 노동문제까지도 지방정부의 업무라는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인식한 본의원은 ‘충청남도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에 대한 지원조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노동인권 관련 조례안들을 완성하여 다음 회기 때 발의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야별 노동자들과 간담회, 의정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만들었고, 충청남도의 노동안전 및 노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충청남도는 충남근로자(노동자)건강센터, 8월부터 문을 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노동권익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현장노동자들 심신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도청의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으로 충남지역의 노동자 건강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노동현장에 만연한 안전경시 등 법위반 사례를 파악하고, 연구·토론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및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을 확립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충청남도,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 현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 산재 통계 자료(충남)

출처: 대전지방노동청

| '18년 충남도 산업재해 현황 |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계	사망	부상	요양	계	사망	부상	요양	계	사망	부상	요양
4,444	148	3,865	431	4,998	149	4,282	567	↑ 554 (↑ 12.47)	↑ 1 (↑ 0.67)	↑ 417 (↑ 10.79)	↑ 136 (↑ 31.55)

1) 업무상 사고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3,925	60	3,865	4,344	62	4,282	↑ 419 (↑ 10.68)	↑ 2 (↑ 3.3)	↑ 417 (↑ 9.74)

2) 업무상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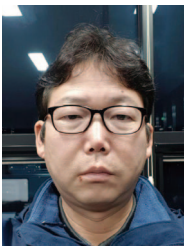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519	88	431	654	87	567	↑ 135 (↑ 26.01)	↑ 1 (↑ 1.14)	↑ 136 (↑ 31.55)

02

오피니언2

‘노동자의 내일을 다르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출발

방효훈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지난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충격적이었다. 이날 경향신문은 1면에 1,200명 노동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중 주요 5대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다.

경향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하루 평균 2.47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들의 죽음을 다시 지도 위에 점으로 표현했다. 전국 어디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성장이라는 빛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이 희생이라는 그늘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그늘은 길게 드리워져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024시간이다. 가장 짧은 독일에 비해 연간 668시간을 더 일한다. 2016년 한국에서는 연간 1,777명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5명에 육박한다.



어떻게 해야 이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중요한 것은 노동의 권리 문제다. 우리 사회 임금노동자는 2,000만 명이 넘는다. 전체인구의 약 34.9%(‘17년 8월 기준)가 노동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10%를 조금 넘는 이들만이 노동조합에 속해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권이 보호되는 노동자는 이보다 더 적다. 반면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이 경우 노조가입률과 협약 적용률이 대체로 70%를 넘는 정도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의 경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물론 미국, 일본에 비해도 노조조직률이 낮다. 당장 이 수치가 평균에라도 근접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워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동안 국가사무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노동정책이 몇몇 지자체의 노력으로 일부나마 제도화 되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노동의 그늘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자각이 한 몫을 했다.

지자체의 경우 노동문제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이 없다. 따라서 예방과 권리지원을 통해 노동권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포함, 중소기업업의 노동자들,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현장에 기반을 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노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또한 중요하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출발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누군가는 ‘한 방울의 물’이라고 표현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충남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보다 건강한 노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03

오피니언3

헝가리의 추억과 다뉴브 강의 비극

권오덕 | 前대전일보주필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의 유람선사고로 우리 관광객 33명 중 26명이 생명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 필자는 8년 전 동유럽관광 때 이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즐긴 적이 있어 꼭 내가 당한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다뉴브 유람선관광은 파리의 센 강, 프라하의 몰다우 강과 함께 유럽 3대야경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하다. 내가 여행할 당시에도 이곳은 필수코스의 하나였었다. 볼거리가 많은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을 사이로 부다와 페스트로 나뉜다. 부다에는 어부의 요새, 마차쉬 성당, 겔레르트 언덕 등 유서 깊은 곳이 많고, 영웅광장, 국회의사당 등이 있는 페스트지구는 상업중심지다. 이 두 지구의 아름다움을 배타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금상첨화다. 해진 후 유람선에서 보는 야경이야말로 환상적이다. 특히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세체니 다리는 너무나 아름답다.

나는 운 좋게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를 세 번(1989년, 1997년, 2011년)이나 가보았고, 갈 때마다 만족스러웠다. 헝가리 인은 동양계 유목민인 훈족과 마자르족 후예여서 우리와 어순이 비슷하고 음식과 생활습속도 유사해 친근감이 들었다. 또 합스부르크와 소련 등 주변 강국의 오랜 지배를 받아 정서가 우리와 비슷하다. 3번의 헝가리여행 중에서 공산치하의 89년도 첫 여행이 가장 추억에 남는다.

그해 가을 우리 일행 12명은 오스트리아 빈을 출발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로 향했다. 도로 옆 구릉지대 초원에는 아름다운 야생화가 활짝 피었었다. 젊을 때 즐겨 들던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도플러의 헝가리전원 환상곡이 들리는 듯 했다. 오스트리아를 떠나 약 2시간 뒤 국경에 도착했다. 처음 접하는 공산국 헝가리에 들어선다는 생각에 모두들 긴장감에 싸였다.

국경에 이르자 총을 멘 군인 두 명이 버스에 올라 위압적인 태도로 여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위 입국심사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한참 지나도 국경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일행 모두가 불안해했다. 1시간 가까이 흐를 무렵 누군가 “월 바라는 모양인데, 양담배를 주면 어떨냐?”고 제안했다. 일행 한명이 갖고 있던 미제 말보로 두 갑을 주고 우리는 즉각 통과할 수 있었다.



“담배 두 갑의 뇌물에 넘어가다니! 공산국가가 이렇게 썩었구나.”라고 모두들 쓴 웃음을 지었다. 이틀 후 빈에 돌아갈 때도 똑같았다. 이번엔 캔 맥주 둘을 주고 국경을 통과했다. 호텔에 들어가자 로비 곳곳에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등 인근 공산국가의 몸 파는 여인들이 우리를 유혹했다. 암달러상도 적지 않았다. 달러를 비싼 가격에 바꿔 주겠다고 꾀었다. 1달러에 공시가 2배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청바지 있으면 고가에 팔라”고도 했다. 가이드는 유혹에 말리지 말 것을 주문했고, 저녁엔 밖에 나가지 말도록 신신당부했다. 이튿날 우리는 헝가리 전통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식당입구에는 마늘을 걸어 놓은 게 보였다. 돼지고기 요리는 우리와 맛이 비슷해 먹을 만했다. 5인조 집시밴드가 막간을 이용해 공연을 했는데 상당한 수준이었다. 주로 브람스의 헝가리무곡과 집시전통음악을 연주했다.

저녁 식사도 넓은 홀에서 했는데 역시 집시밴드가 비슷한 곡을 아름답게 연주했다. 이날 구노의 아베마리아를 연주할 때 우리와 같이 자리한 40대 전후 여성 20여 명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냥 제창이 아닌 2부로 함께 부르는데 상당한 수준이었다. 나도 라틴어로 따라 불렀다. 식사 후 물어보니 네덜란드에서 온 성가대 합창단이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식사였고 감동적인 밤이었다.

다시 다뉴브 강 유람선참사얘기다. 사고가 발생한지 44일 만인 지난 7월 12일 다뉴브 강의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헝가리인 선장 및 선원 장례식과 함께 숨진 한국인에 대한 추모식을 가졌다. 이번 참사에 대한 헝가리인들의 관심과 추모는 상상 밖이었다. 6월에 내한연주회를 가진 이반 피셔지휘의 부다페스트 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한국인을 배려하는 추모곡을 앙코르 곡으로 들려주기도 했다.

우리국민 모두는 이 사건을 보고 299명의 생명을 앗아간 5년 전 세월 호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게다. 어찌 보면 다뉴브강 사고는 세월호 보다 더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뉴브는 9개국을 거치는 유럽 제2의 강이다. 그러나 강폭은 한강의 1/2도 안되는데 수십 척의 배들이 떠다니는 걸 보고 나는 “저러다 부딪혀 사고가 나면 어쩔 것인가?”고 당시에 혼자 뇌까리던 생각이 났다.

NEWS

VOL.89
충남 소식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올해 크게 늘었다 : 충남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올해 71개소

#1

충남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도내 71개 기관이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최종 확정을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규 인증 기업·기관으로는 39개소(대기업 2, 중소기업 36, 공공기관 1)가 선정됐다.

또 유효기간 연장은 24개소(대기업 2, 중소기업 16, 공공기관 6), 재인증은 8개소(중소기업 5, 공공기관 3)가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도내 총 71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획득해 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수가 지난해 196개소에서 올해 223개소로 확대됐다.

도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해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도지사 표창) 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지역 축제 연계 판매전 참가 지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가 우대 △티피(TP)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우대 등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족친화적 인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도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도 여성가족정책관실(041-635-4986) 또는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신청은 매년 4~6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도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도내 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진행해 기업·공공기관의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 어촌계 우수성 전국에서 인정받았다 : 공모전 대상 등 올해 9관왕 어촌활성 앞장

#2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공단 등이 주관하는 4개의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대상 등 총 9개의 상을 휩쓸었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수상 실적은 △어(漁)울림 콘테스트 대상·우수상 △어촌체험마을 최우수·우수상 △귀어귀촌 우수사례 최우수·우수상 △수산물 그리기 대회 대상·최우수·장려상 등 9개이다.

어(漁)울림 콘테스트는 귀어·귀촌·다문화인이 상생하는 우수마을 발굴을 도모하고, 연금제도 시행 등 어촌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전국 11개 신청 마을 중 5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도에서는 △대상 태안군 고남7리 만수동 어촌계 △우수상 태안군 창기7리 어촌계 등 2개 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차지한 만수동 어촌계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 판정자 등 노동력을 상실한 계원에게 공동생산 금액의 30%를 배분해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어촌계 연금제도’와 진입장벽 완화로 5년간 26명의 귀어를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주민 간 화합과 어촌체험 운영 역량을 심사하는 어촌체험마을 평가에서는 전국 21개 신청 마을 중 △최우수상 태안군 대야도 마을 △우수상 서천군 선소리 마을 등 2개 마을이 입상했다.

성공적인 어촌 진입 및 우수어촌계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귀어귀촌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어촌계 부문 최우수상 홍성군 공리어촌계 △개인 부문 우수상 현상용 씨(아산시) 등이 선정됐다.

끝으로 수산물 그리기 대회에서는 전국 40개 학교 재학생 작품 1,666편 가운데 △대상 김현비(서산 서령초) △최우수상 신민서(천안 일봉초) △장려상 김예빈(공주 중동초) 등이 수상했다.

이명준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어촌에 특화된 사업 추진과 알찬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경험을 축적하고, 체험 여건이 좋은 어촌계를 발굴해 활기찬 어촌마을 조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촌특화·귀어귀촌지원센터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성과 공유 차원에서 어촌마을 우수사례를 어촌지도자 교육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

VOL.89
연구원 소식

충남연구원, 2019년 시·군과 더 가까이에서 충남도민의 미래 함께 고민했다. : 2019년 청양군민대토론회 개최

#1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지난 11월 27일 정산고등학교체육관에서 청양군 고추문화마을과 정산중학교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미래발전전략 수립 청양군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연구원과 청양군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충남연구원의 청양군협력과제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군민토론회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고추문화마을과 정산중학교 활용방안에 대해 △친환경 치유센터 △학습관 △귀촌 및 예술

인에 개방과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유치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토론을 이어갔다.

2017년 ‘청양군민의 행복한 미래 100년’을 주제로 청양군 현안과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군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군발전 아이디어 도출에서 시작, 2018년에는 구 청양정보고등학교 활용방안과 청양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활성화 방안이라는 더욱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군민의견을 군정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충남연구원은 정책 수요-공급자를 연계하는 현장지향형 연구,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체감형 연구 수행 등 ‘현장·협업정책 연구(CNI 협력 모델) 추진’을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세운바 있다.

이를 위해 한 해 동안 보령시, 예산군에 이어 태안군과 정책탐방 및 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7월에는 15개 시·군 기획실 담당 공무원과 각 시·군 담당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2020년 시·군별 미래 아젠다’ 및 ‘2020년 과제 방향’을 설정하고 맞춤형 특화 정책과제와 주제를 도출하는 ‘미래정책발굴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시·군미래정책발굴워크숍

이를 통해 태안군의 △인구 7만을 위한 전략 △태양광 전력 활용방안 △연륙교 중장기 비전 수립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 과제 제안, 아산시의 △청정도시와 관련된 에너지 타운 △문예 회관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의 마스터플랜 △먹거리 분야의 시책 방향성에 대한 충남연구원의 지원 제안 등이 제시되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춰 경제,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의 개별 전담연구진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 시·군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구원의 설립목적이기도 한 도민이 더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활용을 위해 더욱 가까운 현장에서 더욱 직접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충남연구원은 ‘현장중심연구’에 대해 말한다. ‘현장중심연구’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단어와 거대한 포부로 만든 두꺼운 책이 아닌, 쉬운 말과 살갓에 닿는 관심으로 내 이웃의 필요한 점을 궁금해 하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며, 정책으로 엮어 내는 것. 그것이 충남연구원이 지향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이다.

2019년 청양군민대토론회



충남연구원, 김연철 통일부장관 초청 특강 개최로 지역별 남북협력사업 방안 모색

#2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2월 09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초청, 현 정부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통해 향후 충남의 지역별 남북협력 사업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평화를 땅에, 경제를 열매에 비유하며, 상호 선순환을 통한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활성화, 내수시장 확대, 경제 지평 확장 및 공동의 이해관계 형성,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 촉진 등으로 '평화경제'를 설명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평화경제'의 사례로 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평화가 유럽연합(EU)의 기반이 되어 유럽의 경제적 발전과 확장을 가져왔듯, 남북의 평화 역시 한반도 경제의 기반이 되어 경제적 발전과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3원칙인 △전쟁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을 통한 '평화경제'의 미래를 제시했다.

강연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의 생태, 관광, 문화유산 및 산림협력과 재난관리, 공유하천 문제 등이 평화협력거점과 역사문화거점, 생태관광거점으로 연결되고, 이는 서울,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고 평양, 남포에 이어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환서해 산업물류벨트와 설악산과 금강산에 이어 단천, 함흥에서 청진, 나선까지 이어지는 환동해 에너지자원벨트, DMZ접경지역 평화벨트로 상호 연계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남북 평화가 가져올 경제효과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덧붙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상호 감시초소 철수 및 화살머리고지 유해공동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9.19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 분권과 협치의 남북관계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 각 영역의 강점을 이용한 상호 협력·연계가 남북교류협력에 빛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난 7월 통일부와 17개 시·도지사의 체계적 포괄적 협력방안 합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또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충남의 위치를 강조했다. “충청남도가 환황해 경제권에서 이미 구축한 역할과 기능 및 충남의 강점인 농축산업, 수산업, 복합물류를 활용해 향후 아시아권에 한반도 평화 지지 협조와 함께 경제적 협력체계 강화 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거리의 차이는 마음의 가까움으로 채워진다”며, “남과 북의 거리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가 향후 충청남도 미래 발전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기반을 통해 충남연구원은 도민이 평화경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충남연구원과 공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충남도민과 공주시민, 충남연구원 관계자 및 공주대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충남의 사계 - 겨울

겨울

- 눈 내린 충남연구원 -

문득 조용히 고개를 돌려보면
낮설고 익숙하게 곁에 선 사람들이 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쉰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게 뭐라고
기꺼이 눈물겨워
마음이 고요히 요동친다.

作. 충남연구원 이민우

